

의안 번호	2061	【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3. 2. 24.(금)
- 제출자 : 박경흠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2. 24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3. 9.(목)

2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-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7조 ~ 제9조)

4. 근거법규

-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, 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- 경계선지능인은 복지 및 교육 분야 등 각종 법령의 지원범위 밖에 있으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도 없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렇듯 정책적 고려도 미흡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「평생교육법」

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195호, 2021. 6. 8.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